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총력'

전북도, 과기부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는 도내 악취의 근본 원인인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악취 제거와 농가 수익 확대를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2019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사업에 태양광 발전연계 지능형 축사 제어 ICT 디바이스 개발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 주관으로 전자 부품연구원, 장수한우지방공사, 도내 축사 태양광 전문가협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4억원(국비 2.4억, 도비 1.6억)을 투입해 축사 태양광 설치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②축사 환경 데이터 기반 폐쇄형 태양광 패널 제어 ③축사 내 악취 저감 및 위생 안전성 확보 ④지능형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ICT융합 디바이스를 개발·실증 연계하여 지능형 축사 관리 모델 제공을 통해 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개발에 참여한 도내 ICT 개발업체들은 해당제품의 개발·적용이 완료되면 장수농가에서 실증테스트를 거치고 조달청에 등록하여 다른 농가에서도 편하게 구매하여 축사 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만성악취로 고생하던 도민들을 위해 축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악취를 최소화하고 축사 태양광 시설 설치로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원하는 기술 제공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가안전보장연구소의 '2019 글로벌인텔리전스 서밋' 개최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국제사회의 동행 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패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국제사회의 동행'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농관원,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위해 현장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하고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

월까지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536천 필지(1,206천명/1,196천ha) 중 부정신청 개선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제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김영태 기자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하화·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문 '활짝'

도, 내일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취업문을 활짝 연다.

전북도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9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해 도내 대학생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설명하는 행사로,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2개소(농협은행, 전북은행), 전북소재 6개 지역대학 및 고

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내용은 오픈캠퍼스와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 안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선배 취업자의 성공사례 발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외에, 기관별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면접 시연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다양한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 이전공공기관 전체 610명 중 지역인재채용규모는 19.5%로 119명이 채용됐으며,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을해 전체 채용규모는 국민연금공단 33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08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6명 등 총 900여명으로 기존 스펙위주의 선발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채용인원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의무채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채용 촉진을 위해 이전기관·지역대학과 함께 오픈캠퍼스 확대운영 등 제반사항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이원택 정부부처장은 "전북혁신도시가 지역산업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고 공공기관별로 특색 있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고 전북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찾아가는 '어류이동병원' 운영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양식장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어류이동병원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류이동병원은 양식장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기생충성,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동진단과 처방을 하게 되며, 운영시기는 병원체가 활성화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5월부터 9월 까지 월 2회씩 도내 양식단지 및 양

식단체를 순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하는 어류질병 전문가인 공수산질병관리사도 참여시켜 현장에서 처방전을 직접 발부하며, 질병관리방법과 예방강구를 위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양식업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육청, 생활밀착형 훈련 중점 을지태극연습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적 대형 재난 및 전쟁 등 국가 위기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연습으로, 도교육청은 물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최근 대형 재

난사고 및 안보상황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위험과 안보 위협을 동시에 대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재난위기상황 대응훈련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완산소방서와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직원들의 소화전·소화기 사용훈련, 중요문서 안전반출 훈련 등도 병행한다.

한편, 전시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 직책편성훈련 등 시설동원학교 재배치 훈련 등도 실시한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전 직원 이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먹밥 및 감자 등 구호 식량으로 비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로 안전운전 유도한다

금융당국, 차량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피해자 피하기 어려운 사고...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된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서다.

또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소방기본법 및 도

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침을 밝혔다.

54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법조계 전문가 뿐 아니라 각 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를 통해 검토를 거친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 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